‘K=김무성, Y=유승민’ 수첩파동 … 당·청 내홍

이준석 “청와대 음종환 행정관이 지목” 주장

민경욱 “음 행정관, 그런말 한적 없다” 말해… 사표 제출

김무성 “문건유출 배후로 지목 … 음해 기가 막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 적힌 ‘청와대 문건파동 배후는 K, Y’라는 메모로부터 비롯된 파장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출신 이준석씨가 메모 속 주인공을 ‘김무성, 유승민’이라고 청와대 홍보수석실 음종환 선임행정관(2급)이 지목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계기가 된 모임의 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음 행정관이 14일 오후 사표를 전격 제출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음 행정관은 최근 자신이 했다고 보도된 발언과 관련해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곧 음 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문 차단을 위한 사실상의 경질 인사로 풀이된다. ‘항명성’ 사퇴파동을 일으킨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면직처리한지 불과 나흘만이다.

말을 처음 했다고 지목된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12월18일 저녁 술자리에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손수조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 등을 만났다. 모임은 음 행정관과 이동빈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 그리고 음 행정관의 지인 등 3명으로 시작됐다. 이어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청년위원인 손수조 위원장이 합류했고, 밤 10~11시쯤 이 전 비대위원이 마지막으로 동석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음 행정관으로부터 ‘김무성·유승민 배후설’을 들었다고 지난 6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김 대표와 유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있었으며 김 대표는 전해들은 말을 수첩에 적어놨다.

이에 대해 이준석씨는 당시 음 행정관이 방송에 출연해 문건 파동과 관련한 발언한 내용을 두고 훈계조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고급정보로서 김무성·유승민 배후설을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자신만 취하지 않았다며 확실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음 행정관은 배후설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관천의 배후는 조응천이다”, “조응천은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혈안이 돼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유승민을 만나고 다니고 김무성에게 들이대는 그런 사람이다”는 등의 말을 했을 뿐이란 얘기다.

당시 모임에 참여했던 손수조 위원장은 배후설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둘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문건 유출 사건의 배후’로 자신을 지목된 것에 대해 “음해”라면서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김 대표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첩을 고의로 노출했다고 보도한 것을 언급하며 “본회의장에서 다른 메모를 찾다가 (사진에) 찍힌 것”이라면서 “그렇게(고의 노출) 누명을 씌우는 것은 더 기가 막히다”고 강조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기업인 가석방, 현재론 어렵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살리기를 주요한 화두로 내세웠다.

김 대표는 당청 소통을 비롯해 개헌,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 임명, 기업인 가석방 등 정국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사회 지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 시작됐던 20여년전 시점, 즉 1990년대 초 일본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며 “우리는 경제발전을 추진하며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비판적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꾸준히 문제가 지적된 당청 소통 문제에 대해선 거듭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금 더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언제든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국민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현재로선 어려운 이야기”라고 했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의지를 재확인하며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대표 역할에 충실하는 외 어떤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했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영입 가능성은 “어떤 분이라도 당의 이념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은 당에 모셔올 생각”이라고만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김치 전통발효단지 조성

80억 들여 남구 김치타운내에

광주시는 김치 관련 자원과 원·부재료 발효가공시설 집적화를 위한 김치 전통발효식품단지를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총 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되며 광주시 남구 김치타운단지 안에 김치산업 원·부재료 발효가공·저장시설과 신소재 기능성 식품가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홍보·판매시설, 젓갈류 발효·저장시설, 숙성김치 발효에 필요한 저장·소포장시설, 신소재 기능성 가공김치 소포장·가공설비, 김치·부재료 소포장재 설비 등도 갖춘다.

또 김치타운 가공시설과 연계한 저장·숙성·포장·유통 등 김치가공과 관련한 모든 처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사업은 다음달부터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투자심사 과정을 거친 뒤 오는 3월께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0월께 착공 내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전통발효식품단지가 조성되면 김치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는 세계김치연구소, 체험·박물관·가공시설이 갖춰진 김치타운과 함께 이 지역 김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현대화된 생산시설 집적화로 타 시장과 차별화된 김치산업 육성이 가능해지고 소비자 선호에 맞는 시설 구축으로 유통시장도 한층 확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봄철 산불발생의 절반 차지

전남도, 소각금지 서약 운동

지난 10년동안 전남도에서 발생한 봄철 산불의 절반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가에서 무심코 논·밭두렁을 태우려다 아까운 산림자원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농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논두렁·밭두렁 소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약 운동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서약서에는 “마을별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않겠다”는 주민 의지를 담았다.

도는 4000개 마을의 서약을 목표로 각 지자체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약 이행은 물론 예방활동 실적이 높은 30개 마을에 현판과 포상금 1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약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은 후 이장 등 마을 대표자가 직접 서약서에 서명해 읍면 산업계에 오는 30일까지 접수하고 서약 기간(서약일로부터 5월15일까지) 동안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으면 된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서약 참여로 산불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불 예방교육과 기동단속 등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력을 강화해 ‘숲 속의 전남’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남도에서는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과 초동진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건당 산림피해 면적이 0.36ha로 최근 10년 대비 37%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경기도 이천서 또 구제역 … 항체 형성 돼지도 감염

백신 불신 확산 우려… 항체형성률 미달 농가 보상금 감액 가능성

경기도 이천시 돼지농장에서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 6마리는 모두 구제역 예방접종을 했고 항체까지 형성된 것으로 확인돼 백신에 대한 불신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이천시에 따르면 전날 율면 한 돼지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6마리가 구제역 의심 증세를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날 양성판정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해당 돼지와 새끼돼지 등 59마리를 도살처분했고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더구나 방역당국이 구제역에 걸린 돼지 6마리를 검사한 결과 모두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밝혀져 백신으로도 구제역을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을 놓고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보상금의 일정부분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등에 따르면 발병시점, 소독 여부, 주사 약물(백신) 투약 여부 등 7개 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게 돼 있다.

이들 규정 가운데 가장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백신 접종 여부다.

방역 당국은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항체 형성률로 잡고 있다.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다고 판단하는 항체 형성률 기준은 어미돼지는 60% 이상, 비육 돼지는 3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들이 백신접종을 소홀히 했다는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